

전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접수

도내 여성농업인 복지 위해 건강관리·문화활동 등 연 15만원 지원... 올해부터 겸업 여성농업인도 지원 대상 포함

전북도가 도내 여성농업인 복지를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정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의 기회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사업량을 확대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증진과 소득 수준이 낮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업·농촌 현실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농외소득 37백만 원/년 미만자) 겸업 여성농업인도 포함해 사업량(45천 명)을 확대하고, 연간 15만 원(자부담 2만 원 포함) 상당의 비우치를 제공 계획이다.

또한, 고령 여성농업인들의 카드발급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까운 면 소재지 지역농협을 포함 220개소에서 편리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81%가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문화 활동과 건강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كرون 발생 전망·향후 과제 토론회를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미كرون 발생 전망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하고 있다.

전북도, 5월까지 구급차 운용·관리실태 점검

도내 구급차 296대 대상

전북도가 오는 5월까지 도내 구급차 296대를 대상으로 의료장비, 의약품,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등 허가된 자에 한해 운행되는 차량이다.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중점 점검사항은 구급차의 의료장비·구급 의약품, 운전사, 응급구조사 등 장비·인력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와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확인 등이다.

또한,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인력 이중 등록 여부도 점검해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한달 여행하기 사업' 성료

전북 여행바람, SNS를 타고 확산 기대

올해 관광트렌드 반영 '워케이션' 주제로 운영

전북도와 (재)전북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진행한 '2021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된 21개 팀은 작년 5~10월까지 전라북도에 체류하며 도내 14개 시·군 325개 여행지를 구석구석 여행했다.

이 사업은 장기체류 여행자들이 도내를 방문해 위축된 관광 수요를 살려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소비 진작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전라북도에 체류하는 동안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 총 5천만 원가량 지출했는데, 이는 재단 지원금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된 21개 팀은 작년 5~10월까지 전라북도에 체류하며 도내 14개 시·군 325개 여행지를 구석구석 여행했다.

참여자들은 전라북도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전라북도한달여행하기 및 재단 유튜브 채널(youtube.com/jbc2016)의 홍보영상을 통해 참여자들의 여행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북도와 재단은 2022년 코로너9로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워케이션(Worcation)'을 주제로 '2022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진흥팀(063-230-747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설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 집중 점검

도·민·관 합동 무허가 음식·유통기한 경과 등 100개소 집중점검

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제조·가공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관주식약청,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판매업체, 대형 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방역패스, 일상회복 위해 도입한 사회적 약속... 개선점 보완할 것"

김부겸 총리 '방역패스 혼란은 국민 피해...법원 판결 신속히 해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법원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과 관련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 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은 가져분배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분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법원 판결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 접종율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령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뉴시스

본사 인사
▲한경봉 군산 취체본부장 명: 의원면직 (1월 7일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생

정읍 종오리 농장, 살처분·반경 10km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전북도는 전북 정읍 소재 종오리 농장(약 1만6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사육중인 오리에 대해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이동식 열처리방식으로 신속히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사육 중인 가금농장 주변을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강화해 위생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